

■ 교육공약 포기 정책숙려제 거부선언 기자회견(2018.08.28.)

우리는 교육공약 포기하 는 정책숙려제를 거부합 니다.

■ 일시 : 2018. 8. 28(화) 11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 연대단체 : 경기혁신학교네트워크,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대구회복중심생활교육연구회, 부산생태유아공동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통합형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적협동조합)평화물결,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회복적생활교육센터(21개 단체, 가나다순)

■ 교육공약 포기 정책숙려제 거부선언 기자회견(2018.08.28.)

우리는 교육공약 포기하는 정책숙려제를 거부합니다.

- ▲ 8월 28일(화)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1개 교육단체들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포기하는 정책숙려제 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함.
- ▲ 지난 두 차례의 공론 속의 과정은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이행하는 정책을 결정하지 못한 교육부가 정책 결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임. 그럼에도 교육부가 하반기에 유치원방과후 영어교육 허용 문제와 학교폭력제도 개선 문제에 대한 정책숙려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또 한 번의 혼란과 무책임한 행정을 예고하고 있음.
- ▲ 2015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교육부가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정책을 결정하면 되는 일이었음.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결정하면 되는 일이었음. 그러나 교육부는 정책결정을 미루고 정책숙려제를 비롯한 공론 속의 과정에 맡겼고, 공론화와 정책숙려제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않는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략함.
- ▲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가치와 비전을 오랜 시간 토론하고 숙의하는 것이 공론 과정을 통해 다루기 적절한 주제임. 지난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관계자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나면 일반 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구조 속에서, 가치와 비전에 따른 판단보다 상반된 두 의견을 융합하는 수준에서 결론이 났으며, 이 결론은 당면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교육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었음.
- ▲ 향후 예고된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 허용 문제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문제와 관련된 정책 숙려제 또한 현재의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정책 숙려제는 결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음.
- ▲ 21개 교육단체는 현재의 청와대와 교육부가 대통령의 교육공약에 대해 책임있게 이행하려는 태도가 없음을 강력 규탄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정책숙려제 참여 거부를 선언함.
- ▲ 21개 교육단체는 청와대와 교육부에게 ‘교육공약 파기하는 정책 숙려제 즉시 중단할 것’, ‘정책 결정의 책임 회피를 각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교

육공약 임기 내에 책임있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 ▲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며 우리는 절대평가 정책이 제대로 최종 대입제도 결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

교육계는 지금 공론화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공론화, 숙의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책을 독단과 독선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복잡한 사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의미있는 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은 교육부가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이행하는 정책 결정을 책임있게 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정책 결정의 책임을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유치원방과후 영어 교육 문제와 학교폭력제도 개선 문제를 정책숙려제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또 다시 무의미한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사회적 혼란의 반복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 ◆ 우리는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책결정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정책숙려제를 거부합니다.

지난 두 차례의 공론 숙의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할 교육개혁의 방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학생부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이 정해져 있었고,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정책 방향도 포기했고, 숙의 과정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대입전형과 학생부 개선에 대한 개혁의 흐름이 분명 존재했고, 방향도 분명했습니다. 고교교육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입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 정부부터 추진되어 오던 흐름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의하고 문제가 많은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 개혁의 흐름을 과거로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교육계 안에 쌓인 문제들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있었고,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

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공론화에 그 결정을 던져 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실시,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한 초중고 필수과목 최소화 및 선택과목 확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검토,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 이 모든 것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대통령의 공약을 책임있게 실현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 추진에 자신이 없는 교육부,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는 청와대는 정책 결정을 미룬 채 그 책임을 하부 기관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였고, 결국 공론화와 정책숙려제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입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와 같은 국가 기관은 자신들이 가진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은 포기한 채 기계적 중립의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정책숙려제와 공론화가 제대로 설계되어 진행될 수 있는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공론화하기에 부적절한 의제만 던져 놓은 채, 입찰 업체에 공론화의 운영을 대부분 맡겼습니다.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온갖 선동적 주장들이 난무했고, 데이터 왜곡, 해석 왜곡도 곳곳에서 일어나, 시민숙의단의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공론화 과정에서 등장한 수많은 주장들이 팩트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조차도 시민숙의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여 포기했습니다. 학생부 개선 정책숙려제의 경우 학생부에 대한 이해도 없는 업체가 설문을 제작하면서 문항 자체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었고, 설문에 응답하는 일반 시민들조차 학생부의 용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립의 태도로 일관하면서, 공론화의 과정 자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 **교육의 문제를 지금과 같은 정책숙려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론 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사안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가치와 비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공론 속의 과정은 교육의 가치와 비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구체적인 정책을 주요 의제로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도출된 결론이 오히려 교육의 가치와 비전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정책을 둘러싼 수많은 요소들과, 결정된 정책이 향후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판단은 단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로 매도되었고, 마치 분쟁 조정을 위한 절차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에서 결론에 도달해 가는 과정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교육시민단체,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나면 일반 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청소년 단체는 목소리 낼 기회에서 거의 배제되었습니다.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미래세대토론회를 하며 목소리를 수렴했지만 시민속의단체 제대로 전달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진 결론은 상반된 의견들의 중간 지점에서 적당한 절충점을 찾아 봉합하는 수준이었고, 이것은 당면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육개혁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갈등만 증폭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에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한 정책숙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은 여러 교육단체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설득하

지만 결국, 사교육을 잡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값싼 공교육에서 유치원방과후영어 교육을 허용하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과도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정도의 결말이 나타날 것입니다.

학교폭력제도 개선 문제는 사법기관으로 고통받는 학교 현실을 호소하는 쪽과 피해자 보호도 못하면서 가해자 처벌 완화만 하려한다면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가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크게 개선하지 못한 채 현 상황에서 학생부 기재를 일부 축소하고, 학교장 종결의 길을 다소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정책숙려제 의제는 학교폭력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교장 종결 확대와, 학생부 일부 미기재에 국한되어 있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결론일 것입니다. 앞으로 예정된 2가지 의제의 정책숙려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 우리는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포기하는 정책숙려제를 거부합니다.

교육부는 일정한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부의 존재 목적입니다. 갈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의제들을 공론화 구조에 던져버릴 경우 그 모든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현재 청와대와 교육부의 그 누구도 대통령의 교육 공약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뒤,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정부를 책임지는 자들의 몫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 교육단체는 앞으로 진행되는 정책숙려제 참여를 모두 거부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책숙려제 안에서 입장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의제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교육부의 공론화 과정을 방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두 번의 혼란이면 충분합니

다.

◆ 우리는 청와대와 교육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교육부는 교육공약 파기하는 정책숙려제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지금까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시간은 충분히 가졌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책임있게 결정하고 정책을 추진하십시오.

둘째, 정책 결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교육부는 각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두 번의 혼란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있는 정책 추진의 자세를 보이십시오.

셋째,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공약을 임기 내에 책임있게 이행하십시오.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한 공약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쉽게 바꿀 수 없는 엄중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청와대는 교육공약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21개 교육단체는 정부가 지난 정책결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교육공약을 지키고 교육개혁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2018. 08. 28

교육공약 포기 정책숙려제 거부선언 참여 단체

경기혁신학교네트워크,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대구회복중심생활교육연구회, 부산생태유아공동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통합형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적협동조합)평화물결,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회복적생활교육센터(21개 단체, 가나다순)

(문의 :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02-876-4078)

<별첨1> 학생부 개선정책숙려제의 문제점

-학생부 개선 정책숙려제 참여 4개단체 공동입장문(2018.07.11.발표)

**[공동입장문] 숙려제 내실화 위해서는 교육부의 외압 차단해야
학생부 개선 정책숙려제 운영 과정의 문제점 되풀이 안돼**

2018.07.11

1. 최근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활발한 논의 속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이 교육부 정책숙려제 1호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난 8일 2차에 걸쳐 진행된 숙의과정을 모두 마치고(6.23~24: 1차, 7.7~8: 2차), 오는 12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생부 개선 사안이 과연 숙려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없지 않았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취지에 동의하기에 우리 전문가 단체들은 자문위에 참여하여 적극 협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신의성실하게 숙의과정에 동참해온 시민정책참여단의 노력을 왜곡할 수도 있는 운영상의 한계가 드러나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2.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육부가 이미 위탁을 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숙려제 운영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의견을 모아내기 위한 숙려제의 근본 취지를 위협할 위험성이 큰 사항입니다. 당초 교육부는 위탁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겠다고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으나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위탁기관의 처지를 이용하여 숙려제의 운영 과정에 사실상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1) 교육부는 위탁기관의 숙려제 운영관련 자문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숙려의 대상이 교육부의 시안을 넘어설 수 있다'는 애초의 원칙과는 다르게 **교육부 시안을 중심으로 논의되도록 압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학생부 공정성 제고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개인 봉사활동 실적' 반영 문제나 자문위 전원이 합의한 유일한 주제인 '누가기록' 문제(특

별교부금 예산과도 관련)에 대해서는 숙의 과정에서 기타 안건으로 처리하여 토의 시간 자체가 거의 배당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2차 숙의과정에서 시민정책참여단이 쟁점 항목에 대해 **투표하기 직전에 교육부 이해관계 부서 과장이 ‘안내’의 형태를 빌어 교육부의 입장을 알리는 등 비상식적인 일정을 관철**시켰습니다. 물론 모든 자문 위원단체 및 시민정책참여단의 “ ‘선거법’에서도 금지하는 문제 있는 행위”라는 강력한 비판으로 후반부 투표 때 ‘안내’가 중단되기는 했으나 이러한 일이 일어난 자체가 숙려 결과를 교육부 시안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심각한 개입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또한 여러 자문위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의견대로 시민정책참여단에게 부실한 온-교육 설문결과 제공이 강행되었습니다.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제공된 이 설문 결과는 **핵심 이슈 관련 설문 문항 자체가 어렵고도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 설문의 신뢰도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붙임1)**. 뿐만 아니라, 정책모니터링단 **표본 추출상의 오류**가 발견되었음에도 보정 절차가 없어 수도권과 특정 연령 및 성별에의 쏠림현상이 있는 참고 자료로서의 효력을 갖기 어려운 자료입니다(붙임2). 더구나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수정 없이 대국민 설문까지 강행한 후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이 설문 결과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처럼 **중복 투표가 가능하여** 제공할 경우 도리어 참여단의 판단을 왜곡시킬 우려가 큰 자료였습니다(교육부 ‘학생부 신뢰도 설문조사’ 부실 논란, 세계일보 2018.06.29자).

3. 급기야 이러한 불통과 외압은 권고안 작성 과정에서도 되풀이되어 권고안 작성까지 파행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본래 투표 결과는 숙려 과정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순서에 정책참여단에게 발표되는 것으로 기획되어 투표 전날인 7일 배부된 행사 안내 책자에 인쇄되었고(붙임3) 당일 진행자의 공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레 교육부가 7월 12일자 언론 브리핑을 위한 ‘엠바고 유지’ 문제를 들어 비공개를 강요하여 계획대로 투표결과가 공유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

육부의 부서별(숙려제 담당부서 및 학생부 내용 담당부서)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친 입장이 번복되어 상당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7월 9일에는 투표결과에 대한 보안 확인과 투표결과를 토대로 하는 권고안 작성을 위한 최종 자문위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역시 교육부의 ‘외압’으로 인해 유회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엠바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2일 11시 발표로부터 불과 두 시간 전인 8시 30분에 투표 결과를 보고 권고안을 작성하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4.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책임 있는 ‘권고안’ 도출은 불가능하고, 12일 발표는 단순히 투표 결과만을 나열하는 ‘의견서’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빈틈을 비집고 교육부가 시민 참여단의 의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지 않고서는 일반인들에게는 암호와 같은 행정 용어 및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가령 자율활동누가기록과 행동특성누가기록은 전혀 다른 시스템). 이렇게 권고안 작성이 고의적으로 유실된 것은 교육부 스스로가 그간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정책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 후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붙임4)고 발표한 정책숙려제의 목적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5. 그 밖에도, 숙려 과정에서 섬세한 고려가 부족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큰 영향을 끼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초·중학교 학생부 기재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웠던 점, 청소년의 삶과 인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생부 기록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의 진행이 어려웠던 한계 또한 지적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6. 우리는 촉박하고도 짧은 숙려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신의성실하게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주신 시민정책참여단께 경의를 표하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숙려제 운영과정에 있었던 문제점은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업무상 해태와 외압이 되풀이된다면, 국민 의견 수렴이라는 숙려제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은 절차와 부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교육 현장에 커다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7. 이에 숙려제 자문위원 단체로 참여했던 우리 단체들은

1. 교육부의 위탁기관에의 외압 방지 장치 마련,
1. 교육부의 안일한 업무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관련자 문책,
1. 향후 숙려결과에 대한 교육부의 자의적 해석을 막을 안전장치 마련,
1. 책임 있는 단위에서의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을 들러리 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며, 더 나아가 정책숙려제 자체의 정당성도 훼손하게 될 것이며, 하반기 2호, 3호로 진행될 학교폭력 문제, 유치원 영어방과후 문제에 대한 정책숙려제 자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음을 참담한 심정으로 밝힙니다. 끝. <붙임자료 있음>

2018.07.11.

실천교육교사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가나다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전교조 학교혁신특별위원회 박세영 사무국장(010-2606-143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9. 주요 서술형 항목의 현행 기재 분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부족하다
- 다소 부족한 편이다
- 적절하다
- 다소 과한 편이다
- 매우 과하다

문9-1. 기재 요소별 입력 글자 상한을 개선안과 같이 축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개선안(-1800자) 보다 축소 글자 수(축소량)를 더 크게 해야 한다
(<입력 글자 상한 변경 예시> 2,200자→1,500자)
- 개선안(-1800자) 보다 축소 글자 수(축소량)를 더 작게 해야 한다
(<입력 글자 상한 변경 예시> 2,200자→3,000자)
- 기타 ()

<붙임2 교육부가 제공한 설문 자료 - 표본 추출 및 보정이 전혀 없다.>

	A	B	C	D	E	F
1	표0. 응답자특성					
2						
3			사례수	%		
4	성별	남성	(830)	30.9		
5		여성	(1854)	69.1		
6	연령	10~19세	(143)	5.3		
7		20~29세	(56)	2.1		
8		30~39세	(436)	16.2		
9		40~49세	(1500)	55.9		
10		50~59세	(535)	19.9		
11		60세 이상	(14)	.5		
12	지역	서울	(313)	11.7		
13		부산	(170)	6.3		
14		대구	(196)	7.3		
15		인천	(86)	3.2		
16		광주	(99)	3.7		
17		대전	(87)	3.2		
18		울산	(95)	3.5		
19		세종	(37)	1.4		
20		경기	(627)	23.4		
21		강원	(44)	1.6		
22		충북	(126)	4.7		
23		충남	(109)	4.1		
24		전북	(85)	3.2		
25		전남	(164)	6.1		
26		경북	(238)	8.9		
27		경남	(167)	6.2		
28		제주	(41)	1.5		
29		권역	수도권	(1026)	38.2	
30	충청권		(359)	13.4		
31	전라권		(348)	13.0		
32	경상권		(866)	32.3		
33	강원/제주		(85)	3.2		
34	직업1	학부모	(1218)	45.4		
35		학생	(153)	5.7		
36		교직원	(1313)	48.9		

<붙임3 7.7~8에 걸친 숙려 때 배포된 책자에 들어간 일정표(교육부 및 자문위 사전 검토) - '10부' 주목>

■ 2차 숙의(day2) : 7월 8일(일)			내용
시간	시간		
07:00~08:30			아침식사 및 휴식
08:30~08:50	20'		몸풀기 및 회의 일정소개
08:50~10:20	90'	<8부>	『교육부 학생부 개선사항 외 기타』토의 및 설문조사 ○ 교육부 학생부개선사항외 제안사항(30') ○ 기타 제안(30') ○ 전체공유(15') ○ 교육부 학생부시안 8개 항목 설문조사(15')
10:20~10:40	20'		휴식 및 참여단교류
10:40~11:40	60'	<9부>	『학생부개선 수상경력기재 및 자율동아리/소논문』 종합토의 및 의견취합(VOTE) ○ 수상경력기재여부 대안분류 공유 및 전체토의(20') ○ 자율동아리/소논문 대안분류 공유 및 전체토의(20') ○ 의견취합(20')
11:40~12:40	60'		점심

-4-

■ 2차 숙의(day2) : 7월 8일(일)			내용
시간	시간		
07:00~08:30			아침식사 및 휴식
12:40~13:40	60'	<9부>	『학생부개선 봉사활동특기사항 및 세부능력/특기사항 확대』토의 및 의견취합(VOTE) 및 참여단 만족도조사 ○ 봉사활동특기사항 대안분류 공유 및 전체토의(20')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공유 및 전체토의(20') ○ 의견취합(10') ○ 학생부시인참여단 만족도 설문조사(10')
13:40~14:10	30'	<10부>	『2차숙의 4대 집중의제 의견취합결과』 확인 및 공유
10~15:00	40'	폐회	『시민참여단 소감나누기 및 향후일정』 ○ 소감나누기(분임:20'+전체공유:20')
	10'		○ 교육부 향후일정 안내 및 감사(5') ○ 귀가안내(5')

<붙임4 '권고문' 작성이 목표임이 드러나 있는 과거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4. 6.(금) 석간 (인터넷.온라인 : 4. 6.(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8. 4. 5.(목)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과	혁신행정담당관	담당과장	최성부 (044-203-6062)
		담당자	사무관 김성희 (044-203-6065)
	교수학습평가과	담당과장	신미경 (044-203-6729)
		담당자	연구관 김한승 (044-203-6447) 연구사 정상명 (044-203-6289)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학생부 개선 방안, 국민이 정한다

-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계획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제1호 안건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 운영 계획(이하 소통계획)을 발표하였다.
-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의 일부 항목과 요소가 사교육을 부추기거나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국민이 직접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교육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 국민 중 100*명 내외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구성된 시민정책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 후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 * 학생(중3~고2), 초·중등 학부모 및 교원, 대학 관계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 각각 20명 정도로 구성 예정
- 다만,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시민정책참여단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책 모니터링단 조사와 '온-교육' 사이트를 통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과정 및
결과 해석의 불공정성에 대한 감사 청구 이유서]

국가교육회의는 2018. 4. 16. 부터 2018. 8. 3.까지 대입제도개편과 관련한 쟁점들을 국민들에게 공론화하고 개편의 방향을 물어 이를 수렴한 대입제도 권고안을 작성하는 일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부당한 행위들이 드러났으므로 감사원은 이를 철저히 감사하여 주십시오.

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의 배경

정부는 문제풀이 암기식 수업, 지나치게 많은 지식의 습득으로는 아이들이 창의융합적 능력, 공동체 정신, 의사소통능력, 심미적 능력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길러내기 어렵다고 보고, 수업과 평가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정하기로 하였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창안되어 2017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되면 내신과 대입제도도 그 취지에 맞게 바뀌는 것이 불가피하여 수능을 개편하기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문재인 대통령 또한 2015 교육과정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능을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하였습니다.

정부는 2015 교육과정과 대통령의 교육공약,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의 틀속에서 주도적으로 대입제도를 구성했어야 했고, 2017년 8월에 발표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자 이와 관련한 판단을 1년 유예하기로 하였고 결국 2018. 4. 11. 관련 쟁점들을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하였습니다. 이후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입제도특별위원회는 다시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시민참여단을 선정하여 그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 7. “선발방법의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 수시에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로 정하며, 수능 평가방법은 국어 수학, 탐구 같은 주요 과목을 상대평가로 유지” 등의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권고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권고안은 위에서 언급한 미래 교육의 흐름, 개정된 교육과정, 대통령의 공약에 위배됩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교육개혁의 맥락안에서 주도적으로 대입제도를 개편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다시 대입제도개편특위에, 또 다시 공론화위원회에,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들에게 떠넘겼으며 이로 인해 대입정책 집행과 과정,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결과적으로 권고안은 현행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고작 이러한 안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는 20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사용하고 시간도 1년을 낭비하였습니다. 더욱 중대한 문제는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를 진행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해석에 있어 불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나. 공론화위원회의 부당한 사무처리 - 책임과 의무의 방기

대입 제도는 결국 우리사회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척도이자 지향하는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는 주요한 도구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을 공명정대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각 과정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각 의제 팀 간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가장 적정한 또는 합목적적이라고 볼 수 없는 불공정한 운영으로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여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1) 공론화의 과정에 대한 불공정성

가) 공론화 의사결정 방식 공개 선후의 문제

공론화의 방식은, 수능 개편의 의제(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그 의제에 대하여 시민참여단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었는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들의 의견을 묻는 정확한 의사결정 방식을 미리 발표하지 않고 대입 제도의 의제(시나리오)를 제안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에게 개편의 방향을 정리해 의제화해서 가져오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크게 수능 상

대평가를 주장하는 의제팀들과 수능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의제팀이 있었는데, 수능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참여자들은 정황상 여러 의제 중 시민참여단이 택일을 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절대평가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의제 2안으로 단일팀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정시 확대 및 수능 상대평가 주장하는 의제는 1안과 3안, 4안으로 3팀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의제팀들이 시나리오를 구성한 6. 16.이 훨씬 지난 7. 11.에서야 시민들의 의사결정방식은 1개의 안만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제별로 5점 척도를 주고 선호도가 어느 정도인지 선택하도록 하는 ‘의제별 선호도 조사’의 방식이란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각 의제 참여자들은 하나의 안으로 통합할 필요가 없었으며 오히려 시민참여단 중 상대평가를 지지한 사람들은 3개의 상대평가 안에 대해 중복으로 선호 의견을 답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또한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의제1팀, 의제3팀, 의제4팀은 3배의 발언 시간을 획득하여 상대평가의 취지 및 장점을 설파할 수 있었고 절대평가 지지의 의제2팀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론화위원회는 반드시 선행하여 결정하고 고지해 주어야 할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특정 의제 팀에게는 매우 불리하고 특정 의제팀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과정과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공론화위원회가 공공기관으로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나) 특정 팀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수용한 점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들이 의제 팀들간의 경쟁을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형평에 맞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현대 일부 팀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에도 수용하고 그 외 팀의 합리적인 요구는 묵살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는 부당함을 넘어 행정의 일반원칙인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에 이르는 사무처리라 할 수도 있을 것인바 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미래비전 공유 등의 배제

본래 공론화위원회는 의제팀별 발표 후 시민참여단들이 ‘미래교육비전’ 이라

는 주제의 조별 토론, ‘내가 바라는 학교’ 라는 10분 분량의 학생들의 인터뷰 동영상 방영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제1팀 등이 미래 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쟁점을 흐리고 특정팀에게 유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이슈 토론과 영상 시청을 순서에서 배제시킬 것을 주장하자 공론화위원회는 의제2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해 버린 것입니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이 미래의 교육비전과 아이들이 바라는 학교상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논의하지 않고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대입제도를 선택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론화위원회는 본래 기획되어 있었던 이 순서를 일부 의제 팀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배제시켜버렸습니다.

미래비전 토의와 학생들이 바라는 학교의 상에 대한 영상 시청은 공론화 위원회에서 본래 시민참여단의 선택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논의라고 판단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편성한 것인데 이를 일부 의제팀의 강력한 반대가 있다하여 수용하였습니다. 미래교육이라는 용어가 쟁점을 흐린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더더구나 특정팀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한 국가의 몇 년후의 대입제도를 결정하는데 어떤 의제팀이든 미래교육 비전을 고려하지 않고 시나리오를 설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특정팀에게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고려 주제인 것입니다. 더구나 특정팀이 제외 주장을 강력히 하였으나 또다른 팀에서는 미래교육 비전 및 ‘학생들이 바라는 학교’란 동영상은 대입제도를 선택함에 매우 중요한 점을 들어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끝까지 피력했습니다. 그런데도 공론화위원회가 특정팀의 주장을 그냥 수용한 것은 합의되지 않은 쟁점을 일방적으로 한 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로써 시민참여단에게 우리 미래 교육 비전에 대한 고민없이 대입제도를 선택하게 하여 퇴행적인 교육을 오늘의 현실에서 반복하게 만드는 등 공익을 현저하게 해하였습니다.

(2) 다른 팀의 자료를 먼저 보고 수정하게 허용한 점

전문가들의 경쟁이 공정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론화 위원회는 의제 4팀 등에게 반칙을 허용하고 무책임하게 용인함으로써 일부 팀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시민참여단에게 의제 각 팀별로 20쪽의 속의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시민참여단 판단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사소한 사실 관계도 확인이 필요하여 상호 팀 간의 검증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수정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은 명확히 해서 제출하기로 하였고 의제 2팀은 다음 날인 7. 4. 제출하였습니다. 7. 5.에 공론화위 실무자가 분량을 추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지를 물었으나 의제2팀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면 새로운 검증을 해야 하고, 이미 상대방의 자료를 본 상태에서 수정을 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여부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실무자는 그와 같은 입장을 공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내용의 추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의제4팀은, 수정은 본인의 권한이라며 이를 따를 이유가 없다고 하며 임의적으로 수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의제 2팀이 이미 제출한 내용에 대한 반론적 보완을 하였습니다. 의제2팀은 7. 10. 오전 11시 30분경에 의제4팀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음을 발견하고 즉시 공론화위에 알려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실무자에게 문의한 결과 7. 12. 회의에서 논의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7. 12.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결과 공론화위원회는 이미 참여단에게 자료집이 발송되었다고 이미 어찌할 수 없다고 하며 사과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론화위는 제출된 자료를 서로 본 후의 자료 수정 보완을 제하지 않아 반칙을 강행하도록 허용하였고, 의제 2팀에게는 다른 팀이 수정을 하였다는 사실 및 수정을 해도 된다는 사실조차도 의제 2팀에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검증회의를 통해 상대방 자료를 다 본 상태에서 이를 반영하여 보완하는 것은 마치 상대방의 답지를 보고 자신의 답지를 고치는 부정행위와 같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했어야 합니다. 만약 수정불가가 정해진 규칙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다른 팀은 수정·보완한

상황 및 의제2팀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언질을 주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는 반칙을 방지하고 꼭 알려주었어야 할 정보를 특정팀에는 고지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공론화위원회는 현저하게 부당한 사무처리를 한 것입니다.

(3) 팩트체크팀 운영에 관한 점

의제2팀이 시민참여단에게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팀을 시민참여단의 2차 숙의과정 현장에 배치하자는 요청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설명없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의제2팀의 요구를 무시한 불공정한 운영이고 결과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정보들이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어 시민참여단의 의사결정을 왜곡시켜 버리는 등 공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의제팀들이 각각 많은 자료와 통계들을 시민참여단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자료들이었지만, 사실을 왜곡한 자료들도 제공될 수 있어 이를 검증하는 팩트체크팀을 운영하여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일은 시민참여단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타당한 문제제기로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약속을 하였는데 결국 아무런 해명없이 이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한 사무처리입니다.

다) 후속 질문을 임의로 만든 점에 대하여

후속 질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의제제안 팀들도 인식하고 있어 교육부가 이송한 쟁점 외에도 공론화 과정에서 많이 제기된 내신 상대평가 문제와 같은 다른 후속 질문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국가교육회의가 정해진 의제에 대해서만 물을 수 있다며 원칙을 고수하는 답을 하였습니다. 후속 질문은 시민참여단의 선택에 대한 해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부가 이송한 쟁점에 대하여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선호가 나올 경우 후속 질문의 응답과 결합하여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속 질문은 이처럼 상당히 중

요한 의사결정의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 의제팀들의 공정한 경쟁과 시민참여단의 공명정대한 판단을 위해서 공론화 주제를 면밀히 알지 못하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임의적으로 창안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는 의제팀들과의 어떠한 사전 공유 및 합의 없이, 본 질문인 ‘의제 선호도 조사’와 중복되면서 상당히 의도성을 내포하고 있는 후속질문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공정성을 상당히 해하였습니다. 이를 테면 후속 질문 자체를 “중장기로 추진될 경우 절대평가의 범위”에 대해서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중장기라는 말은 아예 질문 자체에 답을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질문 자체에 나타난 ‘중장기적’이란 의미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2학년도가 중기인지, 2025학년도가 중기인지, 장기는 어느 때인지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기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시기를 바탕으로 판단하거나, ‘점진적’이란 이미지로 판단하하는 등 각양각색의 해석을 하여 응답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애매모호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공론화의 중요한 결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론화위원회는 의제팀간의 합의없이 시민참여단의 선택에 대한 해석을 좌우할 수 있는 후속 질문 수십개를 넣어 시민참여단의 의사를 왜곡하는 부당한 사무처리를 하였습니다.

라) 소 결

이상 공론화위원회는 1)공론화 의사결정 방식 공개를 의제별 시나리오 정리 후에 발표하여 특정 의제 팀에 불리한 구조를 만들었고, 2)특정 의제 팀의 의견은 불공정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음에도 수용하고, 의제2팀의 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배척하였으며, 3)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는 후속 질문에 대하여 의제팀들과의 합의없이 임의적으로 의도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하는 등 현저히 불공정하게 공론화 과정을 운영해왔습니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부당한 사무처리의 연유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2) 결과해석의 불공정성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월 3일 다음과 같은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론화 결과로 총 6가지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림1)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보도자료 중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 발표	
<공론화 결과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도 조사 결과, 의제1과 의제2가 각각 1위, 2위였으나, 양자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음 ◦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학생부위주전형 내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유사하게 나타남 ◦ 중장기적으로 현행과 비교하여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평가 과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보다 높게 나타남 ◦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제도 지지가 높게 나타남 ◦ 공론화 결과에 대한 수용도가 높으며, 공론화 과정이 생각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남 	

이 발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 공론화위원회의 ‘핵심 조사’ 결과가 ‘참고 조사’ 결과에 의해 부정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에게 총 세차례에 걸친 조사를 했습니다. 의제 4가지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메인 질문과 총 28개의 ‘후속 질문’을 한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각계 대입 전문가들이 대입 제도 의제(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에 대한 순회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참여단들이 숙의를 거쳐 의제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림2)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보도자료 중(2018. 8. 3.)



그렇다면 공론화의 가장 핵심적 결과란 ‘의제 선호도 조사’임이 분명하고, ‘후속 질문’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의제 선호도 조사 결과’보다 ‘후속질문’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결과로 발표되고, 그 결과가 국가교육

회의가 교육부에 이송하는 ‘권고안’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이며 명백한 결과의 왜곡에 해당합니다.
 ‘의제 선호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3)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보도자료 중(2018. 8. 3.)

[공론화 결과]

- 첫째, 4가지 공론화 의제에 대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의제1과 의제2가 각각 1위, 2위였으나, 양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며, 사지선다가 아닌 의제별로 독립된 평가임에도 절대 다수가 지지한 안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지도 조사는 4가지 의제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결과, 의제1 3.40점, 의제2 3.27점으로 각각 1위, 2위로 나타났다.
- 5점 척도 조사에서 의제를 “지지한다” 또는 “매우 지지한다”를 선택한 경우에 해당 의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산정하는 지지 비율 비교에서도 의제1 52.5%, 의제2 48.1%로 동일하게 1위, 2위로 나타났다.

〈공론화 의제 별 지지도 조사 결과(3차 조사 기준)〉

(단위 : 점, %)

구분	의제 1		의제 2		의제 3		의제 4	
	점수	지지 비율						
결과	3.40	52.5	3.27	48.1	2.99	37.1	3.14	44.4

즉, “의제1이 52.5%, 의제2가 48.1% 지지로 각각 1위, 2위였으나 양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의제1은 ‘수능 상대평가 및 정시 45% 이상 시행’을 담은 안입니다. 의제2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수시 정시 비율은 대학 자율 결정’을 주장한 안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상반되는 두 의제의 주장이 공히 지지도에서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론화위원회의 핵심 결과는 의제1과 의제2가 오차범위 내에 지지를 얻어 어떤 안이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 질문인 ‘의제 선호도 조사’ 결과가 ‘후속 질문’의 결과들에 의해 부정되고 ‘후속 질문’의 결과가 공론화위원회의 핵심 결과로 발표되어, 이를 국가교육회의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후속 질문’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4)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보도자료 중(2018. 8. 3.)

- 둘째, 2022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수능위주전형비율의 적정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 수능위주전형 확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일반대학의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이 2019학년도 20.7%, 2020학년도 19.9%인 상황에서, 수능위주전형의 적정 비율에 대해 20% 미만 의견은 9.1%인데 비해, 20% 이상 의견은 82.7%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의 수능위주전형의 적정 비율>

(단위 : %)

구분	10% 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입문적으로 정하기 어려움
결과	4.1	5.0	14.2	21.2	27.2	12.8	3.7	3.6	8.2

- 넷째, 수능 평가방법 조사 결과, 중장기적으로는 현행과 비교하여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 현행보다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53.7%였으며, 현행 유지 의견 11.5%, 현행보다 상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 34.8%^{**}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전 과목 절대평가(26.7%)+절대평가 과목 확대(27.0%)

** 전 과목 상대평가(19.5%)+상대평가 과목 확대(15.3%)

<중장기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적절한 평가방법>

(단위 : %)

구분	전과목 절대평가	절대평가 과목 확대	유지	상대평가 과목 확대	전과목 상대평가
결과	26.7	27.0	11.5	15.3	19.5

즉, 2022학년도 수능의 적정 비율에 대해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2.7%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능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전과목 절대평가는 26.7%,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27%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후속 질문’들의 내용은 ‘의제 선호도 조사’에서 이미 질문했던 내용을 중복해서 물었고, ‘후속 질문’의 응답 결과는 ‘의제 선호도 조사’ 결과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의제 선호도 조사’에서 이미 2022학년도 수능의 비율

을 의제1과 의제2에서 각각 ‘45% 이상’, ‘대학 자율 결정’이라고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물음에 시민참여단은 오차 범위 내의 지지를 보낸 것입니다. 또한 수능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의제 선호도 조사’할 때 의제1은 ‘상대평가’를, 의제2는 ‘전과목 절대평가’를 제시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이에 대해 역시 비슷한 지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때의 수능 평가방법은 2022학년도 대입 수능부터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제 선호도 조사’를 할 때 의제2는 이미 2022학년도부터 수능 평가방법에 대해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주장했고 이에 대해 시민참여단에게 48.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후속 질문’에서 “중장기 적합한 수능 평가방법은?”이란 질문을 해서, ‘전과목 절대평가’는 26.7%라는 응답률을 보였다고 한 것입니다. 의제 2(2022학년도 전과목 절대평가)가 받은 48.1% 지지율은 갑자기 실종되고, 갑자기 ‘전과목 절대평가’는 중장기 과제로, 그마저도 26.7%로 떨어진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핵심 질문(의제 선호도 조사)에서 얻은 통계학적 엄밀한 결과는 “의제1과 의제2는 오차범위 내에 지지를 얻었으므로 지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의제 선호도 조사’와 일관성이 없는 ‘후속 질문’들에 의해 부정되고, 공론화 공식 결과는 ‘2022학년도 수능위주전형은 확대 의견이 지배적,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는 중장기로 시행’이라는 것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이는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것이며, 통계학적 결과에 대한 심각한 부정입니다.

나) ‘의제 선호도 조사’ 결과와 ‘후속 질문’ 결과 비중의 점에 관하여

공론화위원회는 ‘의제 선호도 조사’ 결과와 ‘후속 질문’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둘 사이에 중요도에 있어 차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한 비중으로, 병렬적으로 발표하고 공식 결과로는 오히려 ‘후속 질문’ 결과가 우선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의제 선호도 조사’가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중심 활동이었습니다. 35인의 교육 전문가들이 집중 워크숍을 통해 의제들을 만들고, 전국 순회 대국민토론회를 통해 각 의제들을 홍보하고, 시민참여단들은 이에 대해 두 번의 숙박 워크숍을 통해 학습하고, 지지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반면, ‘후속 질문’들은 의제팀과의 사전 협의나 동의 및 합의없이 공론화위원회 실무진들에 의해 개발되었고, 의제팀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시민참여단에게 곧바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후속 질문’은 앞의 ‘의제 선호도 조사’ 질문과 내용에 있어 서로 모순되지 않게 구성되어야 하고, 공론화 목적에 맞는 질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응답률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 구성이 매우 엄밀하게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후속 질문’을 설계할 때는 의제팀들과 사전 협의 및 합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결과값들이 서로 상충하거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전 작업이 일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후속 질문’들이 진행될 것이란 예측들이 있는 가운데, 7월 25일 의제팀들과 공론화위원회 실무진들과의 회의에서 본 질문(의제 선호도 조사)의 지지에 ‘후속 질문’들이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의제팀들의 질문에 “본 질문이 메인이다”는 것을 실무진 측에서 확실히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의제팀들은 ‘후속 질문’이 설마 ‘메인 질문’보다 우선시 되거나 ‘메일 질문’을 부정하는 결과를 낼 것이란 의심은 추호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론화 결과 발표문에서는 메인과 보조질문 사이에 중요도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두지 않고, 설문 결과를 병렬적으로 나열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총 여섯 개의 공론화 결과를 병렬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 발표를 본 일반 시민들은 공론화위원회의 핵심 활동이 무엇이었는지 상세히 알 수 없고, 본 질문과 보조질문과의 비중 차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병렬적으로 나열된 결과를 동일한 비중으로 받아들일 것이 뻔합니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의제팀 전문가들,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꼼꼼이 모니터링 하고 있는 일부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 외에는 공론화위원회의 발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심각한 왜곡이 있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첫 번째 핵심 질문에 대한 결과에 우선해서 두 번째, 네 번째 질문 결과를 공론화 중심 결과라 할 때 의심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의도가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결과,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은 국가교육회의는 본회의에서 교육부에 이송할 ‘권고안’을 마련할 때,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여섯 가지의 공론화 결과 중 메인 질문인 ‘의제 선호도 조사’ 결과가 아닌 ‘후속 질문’ 결과들만을 그대로 수용하여 ‘권고안’을 최종 채택하게 됩니다.

본 질문 결과가 의미있는 선호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해서, ‘후속 질문’에서 나온 결과로 공론화 결과를 몰고 가는 것은 행정의 부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에 대한 왜곡의 방지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에 대한 왜곡은 바로잡아지지 않고 국가교육회의 ‘권고안’ 최종 채택에 그대로 반영되고 말았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8월 3일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 발표에 이어, 8월 7일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의결하고 교육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대입 선발방법의 비율은 ‘현행보다 확대’, 수능 평가방법은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적용. 2022학년도 대입 개편에서 전과목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이르다’는 권고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본 질문에서는 어떤 지지안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결론이 났는데, 후속 질문들을 통해 얻은 결과를 수용한 것입니다.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 중>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 주요내용]

-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5월 30일 발표한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3가지 사항에 대해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 선발방법의 비율 >

- 첫째, 선발방법의 비율과 관련하여,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만, 설립 목적(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충원난 등을 고려하여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함께 권고하였다.
- 그 사유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 결과에서 시민참여단이 수능위주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 또한, 공론화 결과에서 제시한 일반대학의 적정 수능위주전형 비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21.2%가 30%~40%를, 27.2%가 40~50%를 수능위주전형의 적정 수준으로 응답하였으며, 누적통계기준으로 응답자의 47.3%가 40% 이상을, 68.5%가 30% 이상을 적정 수준으로 보았음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중간 값으로 보면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본 수능위주전형 비율은 약 39.6%라고 공론화 위원회에서 밝혔다.

< 수능 평가방법 >

- 셋째, 수능 평가방법의 경우,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적용을 권고하였다.
- 이는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영어, 한국사는 기존대로 절대평가를 유지하며, 제2외국어/한문 과목에는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향후 수능과목 구조에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이 포함될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결과에서 중장기적으로 전과목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6.7%로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에서 전과목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수능위주전형 확대 의견이 우세하다고 밝힌 점도 고려하였다.

나아가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받은 교육부는 8월 중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에 있는데, 현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존중하고 따를 것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김상곤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 존중...최종안 조속히 마무리"

출고시간 | 2018/08/07 14:25

f t v ... | 🏠 + -

교육부, 김상곤 부총리 주재 긴급 간부회의



<연합뉴스 2018. 08. 07 기사 중>

공론화위원회의 왜곡된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국가교육회의가 ‘권고안’을 의결하고, 또 이 ‘권고안’을 존중하여 교육부가 최종안을 만든다면 이는 20억을

들여 시민참여 공론화 결과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부정한 거짓된 결과로 국가 정책을 세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라. 결론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참여단이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론화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명정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도록 불공정하게 운영하였고 그 결과 또한 왜곡하여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공익감사 처리규정에서 명시하는 공공기관의 부당한 사무처리로서 공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이므로 감사원은 이를 철저히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8. 13.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정치하는엄마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